

기획특집
778



불법수입복사기와 혼탁해진 사무기기 유통시장 질서

중고품의 수입제한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 제도상으로 중고복사기의 안전인증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불법수입과 유통을 조장하는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불법 행위는 비단 복사기뿐만 아니라 식품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국민도 선진국민으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않는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자그마한 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후진국에서 불과 50여년 만에 이러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는 선진경제 규모에 걸맞는 선진정치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탓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법 또한 매우 엄격하게 집행됨으로써 전 분야에 걸쳐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수 백 년을 거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진국이 된 그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무척이나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8월 회사의 발령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 자신의 준법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특히 작년 10월초 우연치 않게 전임자가 2001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불법수입 중고복사기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수입 중고복사기 단속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침 당사의 대리점에서 불법수입 중고복사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리점 측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오에 따라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불법중고 복사기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엄청난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수입통관시 안전인증 취득여부 확인 및 유통판매시 단속 미흡

2001년 불법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시에 수사대상 불법기계 853대 중 보관 중인 159대를 압류하였으나 업자들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작년 10월 사건 발생 2년 만에 압류 복사기를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불과 15대만이 송치되어 결국 관련법에 의한 불법수입 중고복사기의 단속은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는 불법업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법수입을 부추기는 역효과로 나타나 불법 중고복사기의 수입만 늘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작년 11월에 당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으로 이를 KOTRA의 외국인 투자지원 센터의 옴부즈만 사무소에 협력을 의뢰하여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그 동안 단속현황을 파악하고 수입 통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하여 관세청에 관련법의 개선 여부를 문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불법기계의 수입이 증가되는 요인은 수입통관 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입이 용이하며,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적발시 처벌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동일 업계를 모두 방문하여 불법기계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을 협의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데 업계의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므로 공동 협의회 구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KOTRA를 통한 활동은 2월에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캐논 및 신도리코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해결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그 동안의 현상을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기관을 통한 단속은 관련법의 처벌 조항과 단속기관의 무관심 등으로 실효성이 없음을 판단하고 불법기계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수입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공식적으로 관세청에 관련제도의 개선 가능여부를 타진하였다. 그리하여 3월에 관세청의 담당자를 초청하여 정부의 각 기관 담당자와 각 사의 임원이 KOTRA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당시 간담회에 대한 소식은 3월 9일 SBS 8시 뉴스를 통하여 방영되었다.

업계와 KOTRA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후관리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수입 중고복사기의 유통을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므로 관세청에서 99년도에 '세관장확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복사기를 다시 포함시키도록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에 위배되고 복사기를 다시 확인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경우 선례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일괄적으로 사후관리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업계와 KOTRA가 직접 관세청과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인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업계 회의를 실시하여 2002년에 협회에서 건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정식으로 안전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세청에 수입통관 시에 반드시 확인하는 품목을 4,810개에서 4,000개 이하로 줄일 것을 지시한 상태에서 복사기를 확인품목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업계의 건의 안에 매우 난감해 하였다.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자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이 협의하도록 지시하여 4월에 산업자원부에서 다시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도 업계와 산업자원부는 관세청에 문제의 해결방법은 제도의 개선만이 유일하다고 요구하였고 관세청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함을 주장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로 안전이 넘어가게 되었다.

불법수입복사기와 혼탁해진 사무기기 유통시장 질서

그러나 이와 같이 업계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은 4월 3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단속의 강화등 사후관리의 특별대책의 대안이 제시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시로 그에 대한 대책안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불법수입 중고복사기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관련법 처벌의 강화와 단속기관의 확대, 그리고 수입정보 공유의 네트워크 구성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졌으며 특히 경찰과 자치단체, 단속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불법 복사기 차단, 정부·업계·소비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결된 데 대하여 매우 실망하였으나 발 빠르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 기술표준원과 관계기관의 대책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불법수입 중고복사기가 유통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중고품의 수입제한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 제도상으로 중고복사기의 안전인증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불법수입과 유통을 조장하는 이와 같은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전제 하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

불법 행위는 비단 복사기뿐만 아니라 식품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국민도 선진국민으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않는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최재봉

한국후지제록스(주) 마케팅실 시장관리팀
CS Desk 과장